"새만금 SOC 예산 삭감 빅 픽처 아닌 빅 사기"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서 "예산 독재" 질타

尹정부 국정기조 역행 · 잼버리 책임 전가 · 예산삭감 위법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 SOC사업 예산 78% 대폭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하고 2024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 의원은 전북의 중요한 현안인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기 위한 보복성 위법 삭감이자 예산독재다"고 역설했다.

전날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전북 지역 동료의원들과 함께 삭발투쟁에 참석한 안호영 의원은 짧은 머리로 단상에 올랐다. 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삭발 이유를 두고 "정부의 무능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밝히며 결기를 다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행세, 왕 노릇을 하며 안하무인으로 굴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안호영 의원은 8월 29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의 법적 책임주체는 명백히 정부"이며,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역대 정부들에서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온 중요 국책사업"으로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빅 픽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고,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조차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빅 삭감, 스몰 예산'으로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며 "삭감 동기, 내용, 절차, 삭감 폭을 보았을 때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며 자행한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또한 "새만금 내 원활한 기업 유치를 돕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빅 픽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바탕으로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완성이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SOC 예산을 삭감해놓고 빅 픽처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한덕수 총리에게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폭거의 책임을 물어 기재부·여가부·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기 위한 비정상 위법 예산 삭감을 멈추고 새만금 SOC 예산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의 과학적 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향적 교섭 통해 새만금 예산 정상화시켜야"

국힘 정운천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이차전지 중심에 맞는 계획으로 변화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전주을 조직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이차전지와 식품허브 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화가 중심이 돼 새만금이 탈바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 결과 등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한덕수 총리가 첫 언급한 새만금 기본계획이 당초 용역비 10억원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용역은 지난 2010년 용역 환경과는 많이 바뀌었다. 4차 산업과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지금 30개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이차전지 중심에 맞는 기본계획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식품허브 산업과 농생명용지에 컨벤션허브 중심의 마이스산업을 기본 계획에 꼭 집어넣는 용역을 맡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농생명 용지를 농지가 아닌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하고 국가에 필요한 산업단지 용지로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며 "제로베이스 변경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전향적인 교섭을 통해 지금은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면서 "내부지역만 연결도로나 간선도로, 신항만 등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다만 공항과 철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아닌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공항이나 철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업 등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논 뒤 공항이나 철도의 필요성이 커질 때 속도를 내자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잼버리 초기 단계 실패 등에 대해 "일각에서 화장실 문제 등으로 촉발된 잼버리 초기 단계 실패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총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오히려 잼버리가 해피엔딩을 마무리 되며 엑스포 유치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송언석 의원 등 전북을 비판한 의원 등의 발언은 말이 안된다. 갈등을 유발한 의원들은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해결하려 한다"라며 "국회 예산 단계가 두 달 기간 동안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 되도록 로드맵을 지금 잘 짜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는 설령 우리당과 용산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했다. 전북을 위해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여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도 했다.

/뉴시스

'새만금 예산 살리기'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가 대폭 삭감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을 살리기 위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농성장에서 지난 5일 시작된 전북도의원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보호

민주 윤준병 의원,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 대표발의

오염수 해양 투기 국가 농수산물 등 수입금지 근거 마련

어업재해 ·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 피해 포함 등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는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했다. 약 137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포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어민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는 독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며 "태평양 바다와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